

‘행복하고 새로운 충남’ 실현을 위한 인프라 투자가 필요하다

- 인프라 수요 늘고 현안은 쌓여만 가는데 투자는 오히려 축소 -

김 영 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ydkim@cerik.re.kr

충남, 인구 급증과 사회 변화로 인프라 수요 증가

충남은 사회·경제적인 변화에 따라 생활 및 지역경제 성장과 직결된 인프라 수요가 증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충남 지역 인구는 2012년 세종시 분리에 따라 크게 축소되었으나, 이후 급격한 인구 증가¹⁾로 분리 4년 만인 2016년에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

이러한 인구 증가는 지역의 경제 성장과 산업 구조의 변화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충남의 지역내총생산(GRDP)은 꾸준히 증가해 지난 5년간 전국 평균을 상회해 왔다.²⁾ 특히, 산업 구조가 제조업 중심³⁾으로 급격히 전환되면서 이들 산업이 지역경제 성장을 견인해 왔다. 그 결과 경제활동 인구 및 고용률 모두 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했으며,⁴⁾ 사업체 수 증가로 일자리 여건도 개선되고 있다.⁵⁾ 이에 따라 산업 및 경제 관련 인프라 수요가 커지고 있고, 동시에 지역의 정주 환경 개선을 위한 생활 인프라 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자연재해 및 사회적 재난 등에 대비하는 지역 안전 인프라 수요도 여전히 큰 상황이다. 충남 지역의 경우 강풍 및 호우·태풍 피해 등 자연재해 피해는 건수로는 많지 않으나, 피해 금액 규모는 다른 광역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다. 사회적 재난(화재, 교통사고, 범죄, 안전사고 등)으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도 지속되고 있다. 특히, 서산시, 보령시의 종합 안전등급은 9등급으로 최하위 수준이고, 청양군은 안전등급 10등급으로 최하위 등급을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인프라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충남의 최근 5년간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는 여전히 전국 평균(2017년 39.3%)에 못 미치는 상황으로 자체적으로 지역 내 인프라 수요에 대응해 나가기 어려운 실정이다.

도로의 80%가 중·소로, 상·하수도 보급률 전국 최저

충남의 전체 도로 포장률은 타 광역도보다 높은 수준이나, 충남 전체 도로 연장의 52.5%를 차지하는 시·군도에서 시도는 76.9%, 군도는 80.5%

1) 2003년 이후 지난 14년 동안 충남 순증가 인구는 18만 4,169명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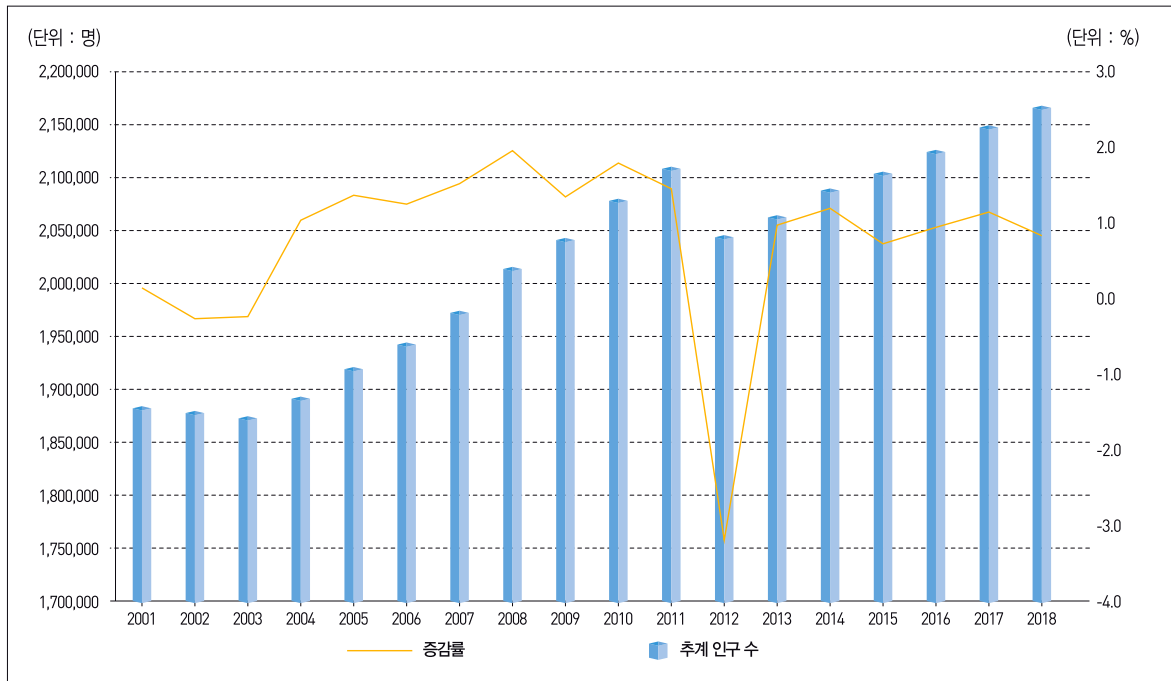
2) 최근 5년간(2011~2016년) 충남 GRDP는 5.0%, 전국 평균은 4.2%임.

3) 2016년 기준 제조업 비중은 44.9%로 전국 평균은 26.5%임.

4) 최근 10년간 경제활동참가율은 63.5%(전국 평균 62.0%), 고용률은 61.5%(전국 평균 60.4%)임.

5) 충남 구인 배수(신규 구인 인원/신규 구직 건수) 변화 : 2007~2011년 연평균 0.79 → 2012~2016년 0.8

충남의 추계 인구 수 추이



의 포장률에 그치고 있다. 특히, 폭원 12m 미만 소로가 전체의 48.0%이고, 중로(12~25m)를 포함할 경우 전체의 80.4%가 중·소로이다. 전체 교량 중 30년 이상 된 교량이 27.6%를 차지하고 있으며(20년 이상 64.5%), 충남 소재 29개 터널 중 20년 이상 된 터널은 전체의 17.2%에 이른다. 이에 따라 도로 및 도로 시설물 관련 유지관리비 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⁶⁾

충남을 통과하는 철도로는 고속철 2개, 광역철 3개, 기타 2개 노선이 있다. 시·군 간 철도 연계성이 낮아 확충 요구가 지속되고 있는데, 주요 도시를 연결하는 철도는 장항선이 유일하다. 하지만 장항선도 단선에 저속 철도이기 때문에 교통편으로서 기능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 항만의 경우,

당진항 등의 가파른 물동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항만 확충은 늦어지고 있으며, 노후화된 국가 어항의 정비도 미흡한 상황이다.⁷⁾

충남의 기 조성된 126개 산업단지 가운데 52개소가 20년 이상 된 노후 단지(41.3%)인데, 세부적으로 농공단지가 48개소이며, 일반산업단지 4개소에 이른다. 또한, 전통시장 및 상가에 대한 현대화 사업을 지속하고 있으나, 시설 노후화는 계속되고 있다. 충남 지역의 58개 전통시장 중 C등급이 21개소, D등급 8개소, E등급도 2개소다.⁸⁾

충남의 상수도 보급률은 2015년 기준 84.4%로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⁹⁾을 나타내고 있으며, 시·군별로도 큰 차이¹⁰⁾를 보이고 있다. 경년별로는 전체 상수도관 중 19.5%가 20년을 초과한

6) 2016년 기준으로 도로 유지보수 비용은 1,025억원으로 전국에서 6번째로 높음.

7) 외연도항의 경우, 1994년 조성되어 20년 이상 경과해 자연재해에 취약함.

8) 전국적으로 E등급 전통시장은 61개소. 이 중 2개가 충남에 소재하고 있음.

9) 2015년 상수도 보급률은 전국적으로는 96.5%, 광역도 평균은 92.0%임.

10) 계룡시는 96.4%인 반면, 청양군은 44.1%임. 충남 전체 평균에 못 미치는 시·군이 10곳임.

상태로서 노후화가 진전되고 있다. 충남의 하수도 보급률도 전국 최저 수준이다. 계획 연장 대비 73.1%에 불과한 하수관로 시설 보급률이 그 원인으로 분석된다. 2015년 기준으로 충남의 하수도 보급률은 전국에서 가장 낮은 74.3%로서 전국 평균인 92.9%와 비교하면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

아울러 충남 지역 내 하천(국가·지방) 실태를 살펴보면, 500개소의 제방 정비 필요 구간 중 31.5%가 아직 미정비 상태에 있다. 소하천도 미정비 상태인 곳이 1,176개소, 연장 1,633km에 이른다.

공원·녹지 시설도 불충분하다. 9개의 광역도 중 제주와 경기 다음으로 낮은 수준이어서 시설 확충이 필요한 실정이다. 체육시설은 2,977개가 있으나, 이 중 공공시설은 29.9%에 불과해 민간 시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시·군별로 비교하면 시설의 양적 차이가 커 천안시와 아산시에 집중된 반면, 청양군, 태안군, 서천군은 크게 부족한 상황이다. 높아지는 관광시설 수요에도 불구하고, 2014~2017년까지 4년 동안 충남의 숙박시설, 휴양시설, 그리고 편의시설 등의 변화는 거의 없었다.

충남 지역 내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교 가운데 30년 이상 된 학교 건물은 1,411개 동이다. 이 중 보강 및 개축이 시급한 C등급 건물은 25개 동에 이른다. 역내 폐교는 44개교이며, 이 중 63.6%인 28개교가 미활용 중에 있어 이에 대한 활용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2017년 현재 내진 보강 대상 학교 건물 2,113개 동 가운데 534개 동만 내진 보강이 적용되어 있어 내진화율은 25%에 불과한 실정이다.

한편, 충남의 20년 이상 된 주택은 전체의 42.1%로서 전국 평균인 43.8% 대비 낮은 편이다. 하지만 30년 이상의 주택 비중은 21.4%로 전국 평균인 16.3% 대비 5%p 이상 높다. 특히, 단독주택 비중이 33.5%로서 전국 평균(24.3%)을 크게 상회하여 단기적으로 이러한 주택의 노후화 대응에 어려움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빈집도 증가하고 있는데, 지역 내 빈집은 7만 4,000호로 전체 주택의 9.8%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전국 평균인 6.5%보다 3.3%p 높은 수치이다.

인프라 현안 많음에도 관련 예산은 지속 축소

인프라 현안이 많은 충남 지역이지만, 관련 예산 편성은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다. 지난 7년 동안 ‘수송 및 교통’ 예산은 평균 2.0%p씩 증가하는 데 그쳤고, ‘국토 및 지역개발’ 예산은 연평균 5.6%p씩 감소 편성됐다. 특히, 제조업 중심의 충남 특성에도 불구하고 산업단지 예산¹¹⁾이 급감했고, 지역 및 도시 관련 예산 지역 및 도시 예산은¹²⁾도 축소 편성됐다. 노후 건축물 증대 등을 감안할 때 이러한 예산 축소는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가능성이 높다.

투자가 줄면서 당초 계획된 인프라 확충 계획도 차질을 빚고 있다. 실제로 2013~2017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대비 실제 투입된 수송 및 교통 분야와 사회복지 분야 투자 추이를 비교해보면, 수송 및 교통 예산은 축소 실행된 반면에 사회복지 예산은 오히려 확대 편성됐다.

이처럼 인프라 분야 투자의 계획 대비 집행이 떨어짐에 따라, 관련 사업들의 공기 지연¹³⁾ 및 사업 지연¹⁴⁾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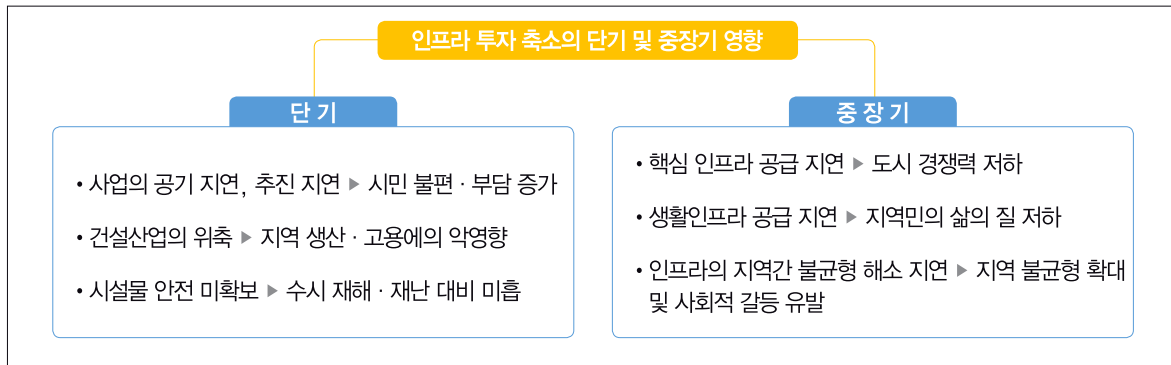
11) 산업단지 예산은 최근 7년간(2011~2017년) 연평균 5.5%p씩 감소함.

12) 최근 7년간(2011~2017년) 연평균 17.0%p씩 감소함.

13) 국가지원 지방도 건설사업인 ‘선장~염치(당초 2010~2017년)’, ‘대술~정안(2014~2017년)’ 등 다수의 공사가 지연되고 있음.

14) 지방도 615(당진~석문), 지방도 618호(내포신도시~세종시), 지방도 645호(계룡~논산) 등 다수의 사업들도 열악한 충남의 재정 여건으로 제때 착공되지 못한 상황임.

인프라 투자 축소가 지역에 미치는 파급효과



하는 조기 시설물 안전 확보 대응도 미흡한 상황이다.¹⁵⁾ 결국 충남의 인프라 투자 축소는 단기적으로 지역민 불편 및 부담을 증가시키고, 지역 생산 및 고용에 악영향 등을 유발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지역민의 삶의 질과 지역 경쟁력 저하 등을 초래할 수 있다.

인프라 투자 방향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주거 환경 개선 및 사회복지 확충을 위해 30년 장기임대 · 임대분양, 사회적 공공주택을 2만 5,000호 건설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그리고 당진 지역의 도비도~대조도~우무도~소난지도~대난지도 4km 구간과 태안 지역의 안면도 영목~소도~추도 구간 1,300m, 보령 지역의 원산도~효자도 구간 800m에 연륙교를 건설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도서 지역까지 전기 · 가스를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수산물의 신속한 이동과 관광객 증가로 인한 수입 증대를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30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았던 안면도의 관광특구 개발을 위한 공공의 적극적인 개발 계획 수립 및 추진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그 외에도 중부권 동서횡단 철도 건설, 수도권 전철 독립기념관

연장 등 지역의 핵심 교통사업들을 공약하였다.

충남의 현재 인프라 실태 및 그동안의 인프라 투자 정책 평가를 바탕으로 지역민들의 수요를 반영한 인프라 투자의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교통 · 물류 분야의 혁신적인 인프라 전략이 요구된다. 둘째, 충남이 향후 발전 모델로 지향하고 있는 행복하고 새로운 충남 실현을 위한 인프라의 투자가 필요하다. 이에 맞춰 산업 및 경제 분야 인프라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있어야 한다. 대표적으로 산업 집적지의 구축과 4차 산업혁명 등 산업 환경 변화에 맞춘 경제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 셋째, 환경 친화적이고 안전한 삶의 공간 확보를 위한 인프라 투자가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청정 충남 구현을 위한 환경 인프라 공급 확충, 자연재해 및 사회적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을 위한 방재 인프라 투자가 중요하다. 넷째, 지역민들의 행복감 증진을 위한 지역민 친화적인 정주 공간 조성도 중요한 과제다. 마지막으로, 풍부한 관광 자원의 개발과 공공 문화예술 인프라의 확충을 통해 다시 찾고 싶은 충남을 만들기 위한 제반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END**

15) 노후 상 · 하수도 시설(상수관로, 하수관로 등)의 경우 높은 누수율과 안전 저해 위험에도 불구하고 조기 시설 개선 작업을 마무리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